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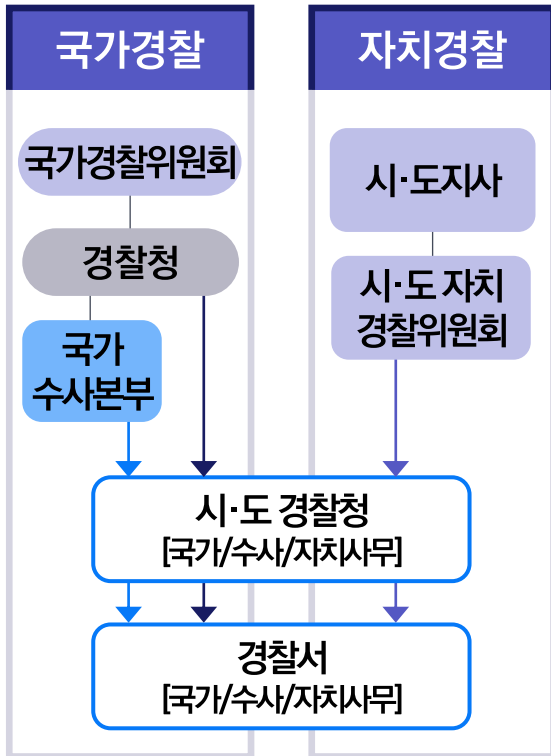
2021년 업무계획 보고

2021. 3. 8.



4년간 주요 성과

경찰 개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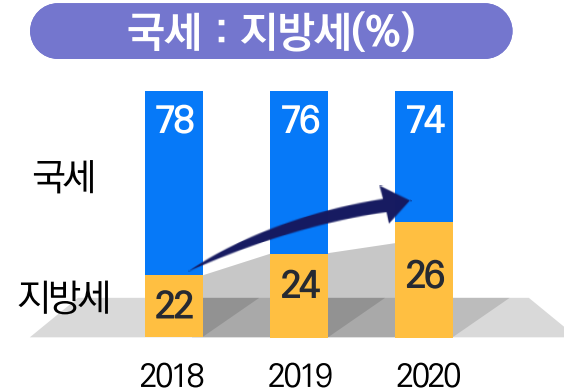
「경찰법」 전부개정 등 경찰개혁법안 통과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에 비상한 정책대응



실질적 자치분권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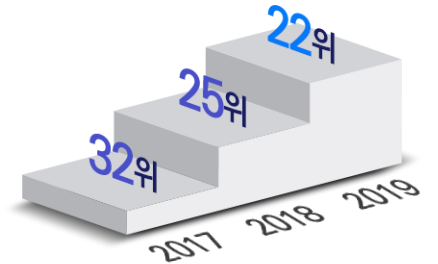
-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1단계 재정분권 완성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 추진

-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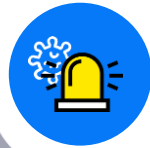
OECD 정부신뢰도



디지털정부 선도국가 도약

-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20)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 3회 연속 1위 (15·17·19)

업무추진 여건 및 정책방향



코로나19 등 재난 불확실성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디지털·비대면 전환 가속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찰개혁

- 01 책임수사체계 확립
- 02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 03 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안전

- 01 코로나19 총력 대응
- 02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 03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자치분권
지역활력

- 01 자치분권 2.0
- 02 지역경제 위기 극복
- 03 지역균형뉴딜·지방소멸대응



정부혁신

- 01 데이터 기반 행정
- 02 공공부문 디지털 뉴딜
- 03 참여·협업 활성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01 수사지휘 역량 강화



국수본-시도경찰청-경찰서
보고·지휘체계 확립



‘시도경찰청 집중지휘’ 도입
시도청 지휘·지원, 경찰서 수사



수사지휘역량 종합평가



02 직접수사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범위 확대
직접수사 조직·인력 확충



전문분야별 중심 시도경찰청 운영
공공, 금융, 특허, 산업기술, 출입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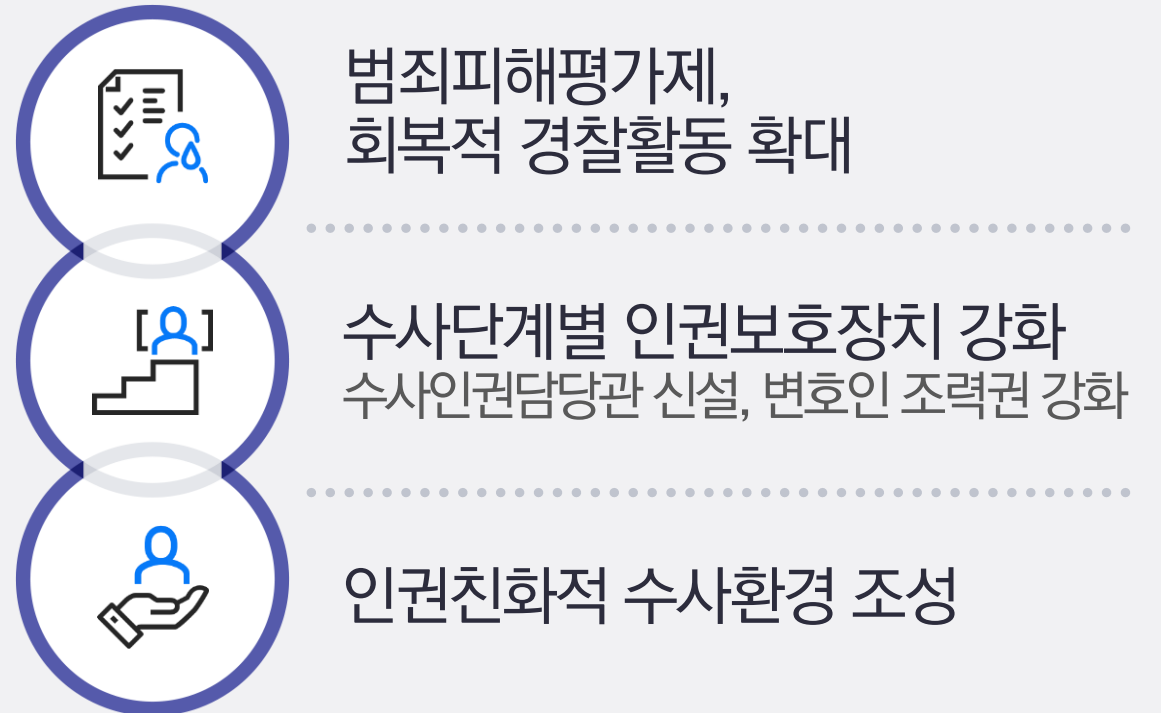


수사관 자격관리제 본격 실시

03 수사종결 완결성 제고



04 인권·피해자 중심 수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시도별 자치경찰 조례,
위원회 등 완비
및 시범운영(~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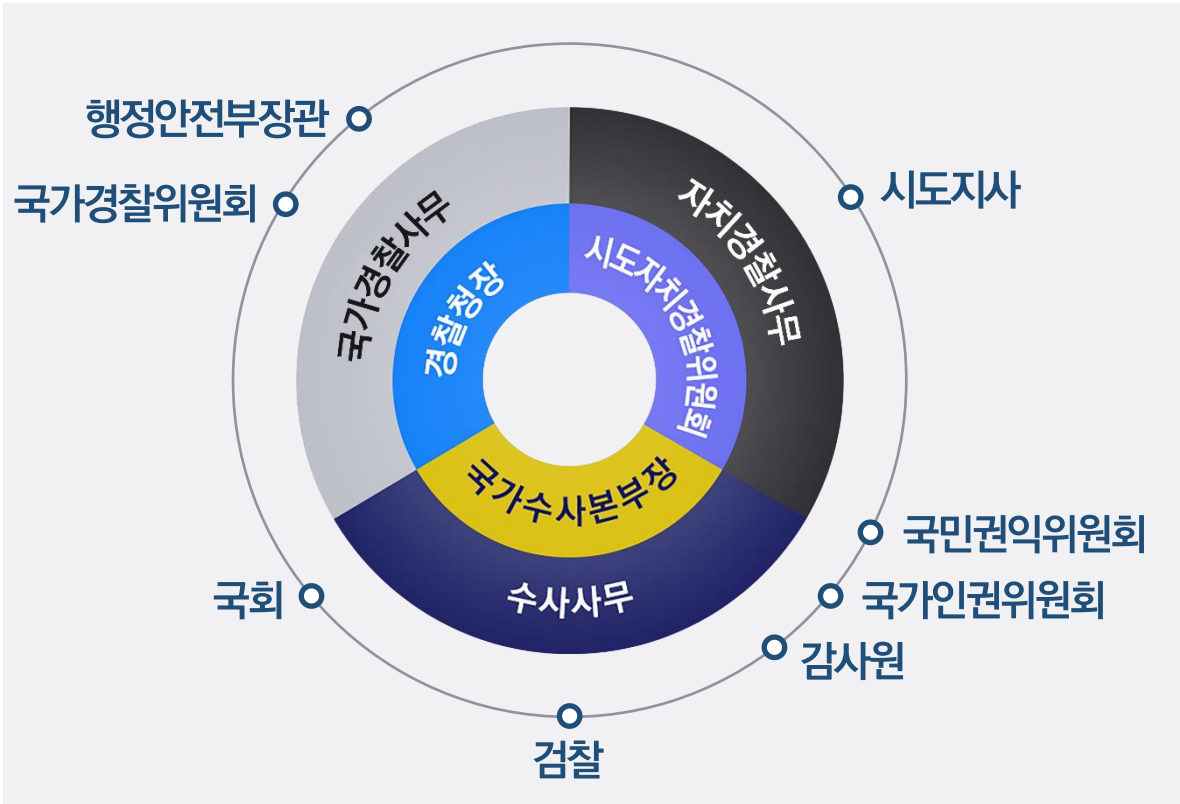


—
자치경찰·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교통 등
치안서비스 제공(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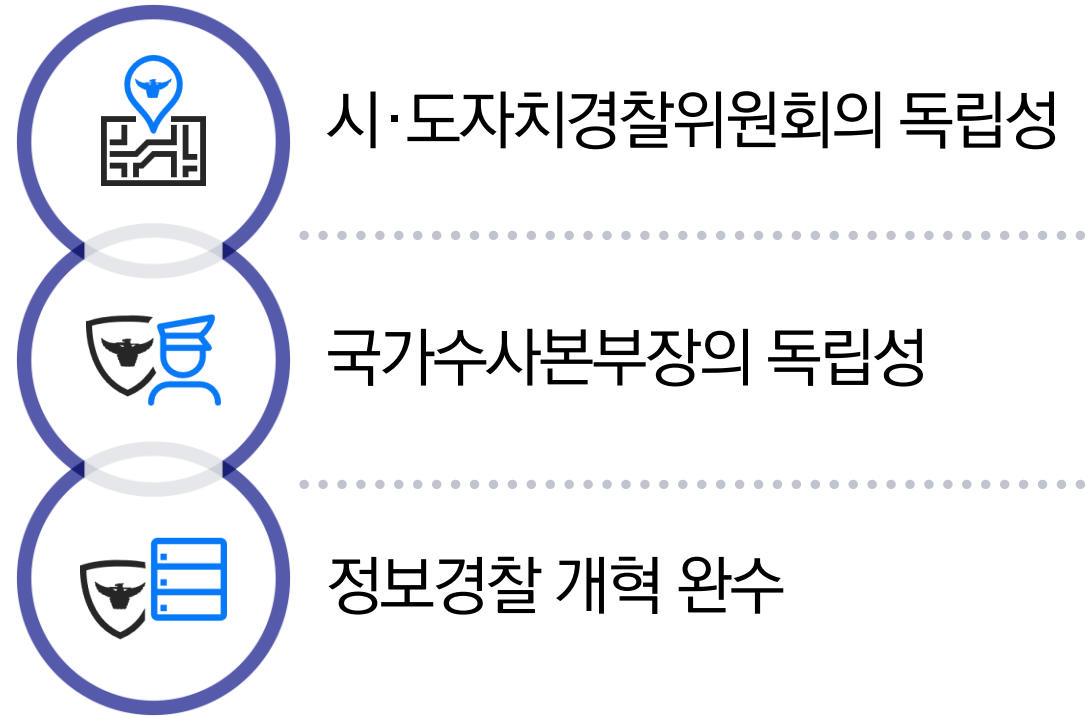


—
자치행정-치안행정 간
연계 강화로
중장기 발전 추진

경찰권 분산 및 통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신속한 검사 지원



생활치료센터 선제적 확보

현장의 백신접종 점검·지원

중요-지방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백신접종 시기·장소를 민간 앱으로 안내

전방위 대응체계 보강

특별 재정지원 및 인력 총원

자율·책임 방역을 위한 현장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소
시·도별 전담책임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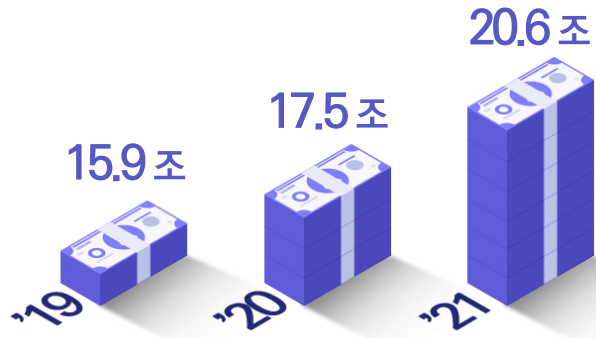


ICT기반 신속 대응



국민관점의 실질적 회복

- ☑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확대



-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 ☑ 핵심시설 중심 국가안전대진단

재난 발생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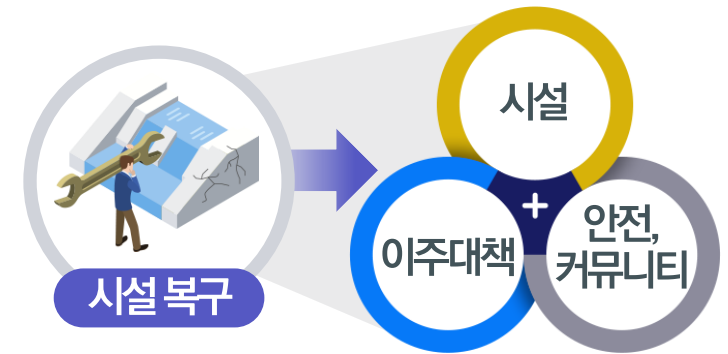
-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 ☑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
- ☑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재난 발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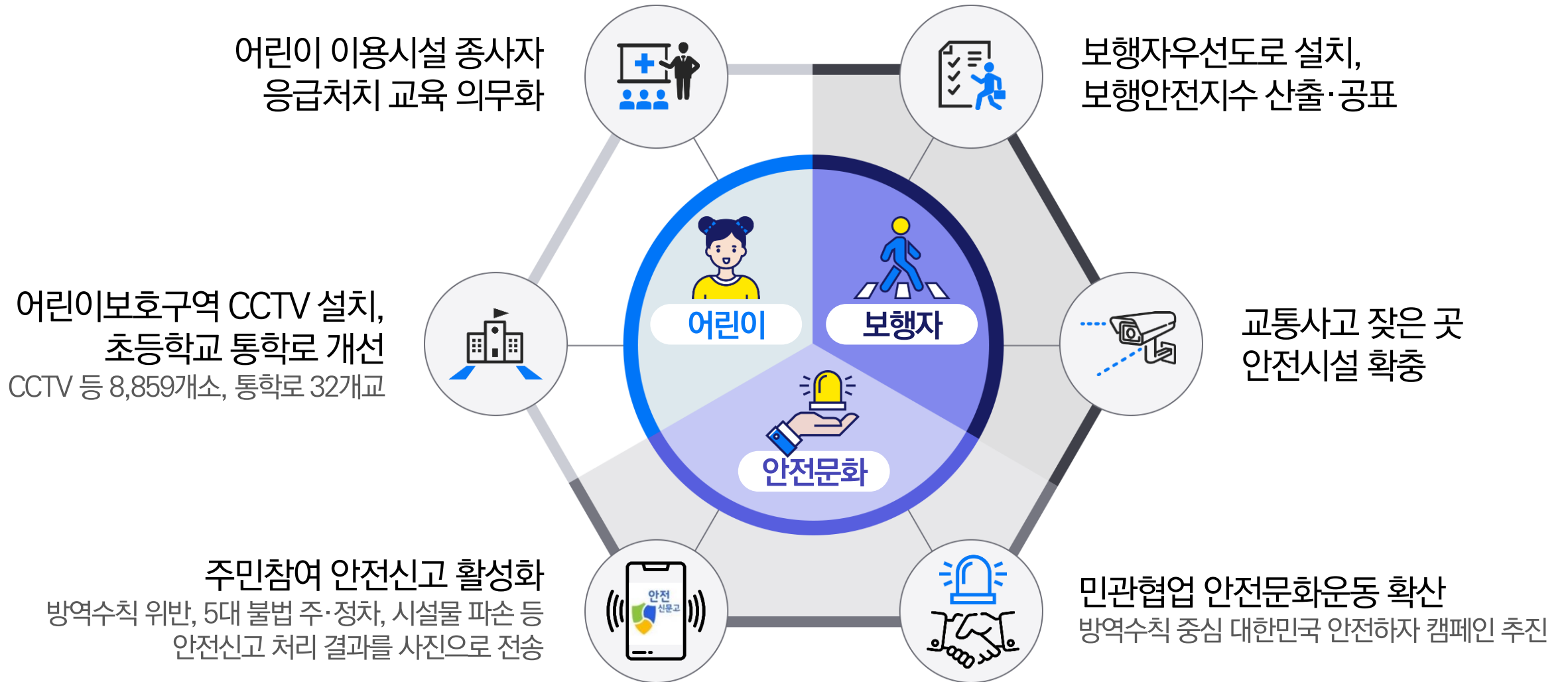
- ☑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3주 → 1주)
- ☑ 항구적 생활복구 제도화



- ☑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재난 발생 이후

국민과 함께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

자치분권·지역활력

주민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을 구현하겠습니다.



- ✔ 「주민참여 3법」 제·개정
- ✔ 주민자치회 본격 도입
- ✔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



- ✔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 독립된 인사권 부여



-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 재정집행 자율성 제고
- ✔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2

자치분권·지역활력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2단계 재정분권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신세원 발굴, 탈세 근절 등
세입기반 확충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취약계층, 청년 등 일자리 10만개



‘착한 임대인 운동’ 적극 선도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 세제·금융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새마을금고 긴급대출 등



지역균형 뉴딜 확산, 지방소멸 위기 대응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 성과 조기 창출



지역 대표사업
발굴 ·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력산업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연계



규제혁신,
투자심사 간소화 등
뉴딜 걸림돌 해소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마을 조성,
청년형 마을기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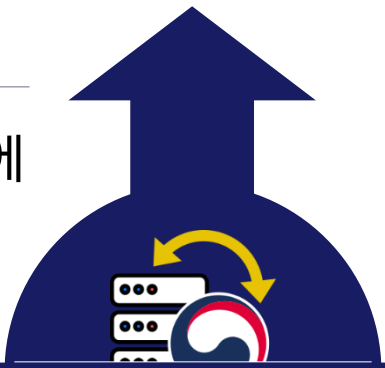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완료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비정형데이터 개방
(영상·사진 등)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

'보조금24' 개시

(4월~) 중앙부처 300여종 + (12월~) 자치단체 6,000여종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확대

(~20) 임신, 출산, 돌봄 등 + (21~) 창업, 취업, 재기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 기반



데이터 용어·형식
통일·표준화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



「데이터기반
행정법」 시행

디지털 증명 시대

모바일 신분증 발급

- (21) 운전면허증 +
- (22) 장애인등록증 등 확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 제공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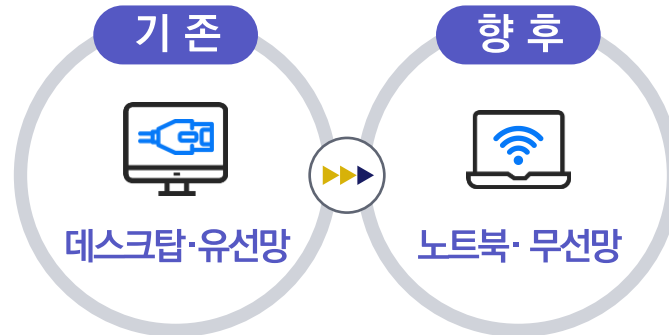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5G 국가망 구축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개시

편리한 공공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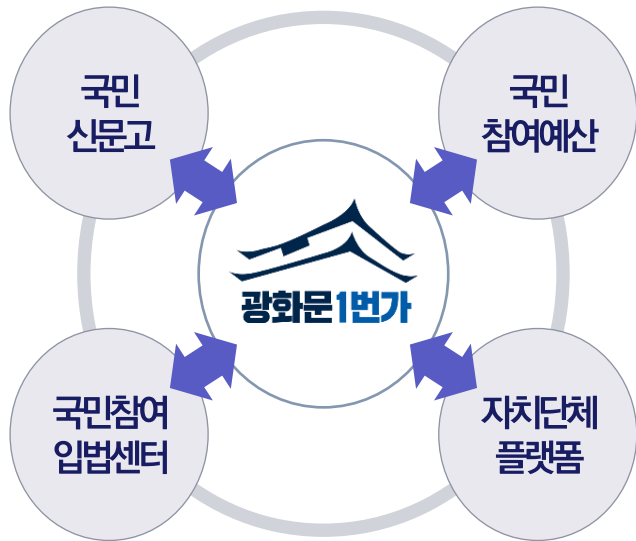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 이용



1개의 ID로 200개 공공웹사이트 로그인(디지털 원패스)

국민참여 기제 내실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모든 참여플랫폼 연계



국민참여 제도적 기반 강화

-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
- 온라인 공청회 개최 제도화
「행정절차법」 개정
-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칸막이 없는 협업

‘협업 이음터’ 활성화



국민제안 빅데이터 분석 및
연계·공유로 정책화 지원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교통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등 ICT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직접 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활성화 등
주민의,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신분증, 국민비서 서비스 등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